

팀장에게 경찰수사 개시·종결권 부여 경찰청, 전문 수사관 인증프로그램 도입

경찰청이 최근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대처하고, 국민의 인권 기대지수에 부응하며,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수사경찰 교육 및 전문수사관 인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사요원 선발 및 3단계 교육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수사경찰 교육 및 전문수사관 인증 프로그램』은 수사경찰 선발과 교육을 시스템화하여 우수 수사요원을 확보하고,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수사경찰의 전문화를 이루겠다는 결의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수사경찰 교육 및 전문수사관 인증 프로그램은 우수수사요원 선발·확보, 초임수사관 실무적응 프로그램, 전문수사관 양성 및 자격인증 프로그램, 수사팀장 자격제 시행, 교육기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경찰청은 우수한 수사요원 선발·확보를 위해 1차 필기시험, 2차 구술면접을 통해 지원자에 대한 적격·발전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며, 사법시험 출신자는 수사경과 부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내

부 우수자원을 활용하며, 수사관련학문 전공 학사이상 학력소지자 등 외부 전문가도 특별채용할 방침이다. 또한 초임수사관 실무 적응 프로그램으로 수사경찰 선발과 동시



과학수사요원들이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에 「수사경찰 양성교육과정」에 입교하여 법률 소양, 기초수사 기법 등 수사관 적응 교육 실시 후 시보수사관으로 관서별 배치하며, 시보수사관은 독자적인 사건처리 능력을 갖추 때까지 사건배당을 지양하고 배치일로부터 1년간 소속 팀장 및 전문수사관의 업무보

조를 통해 수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1:1로 OJT(on the job training) 실시하는 한편 시보기간중 업무자세 및 OJT 결과를 평가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수사경과를 발령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수사팀장은 수사경력 5년 이상(경위 채용자는 3년 이상)인 수사관으로,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위·경감으로 보임함으로써 적절하고 책임있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경감 팀장까지 실제 수사요원화하여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팀장에게 경찰수사 개시·종결권을 부여하는 「팀별 책임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경찰수사교육원을 신설키로 했는데, 경찰청은 경찰수사보안연구소를 「경찰수사교육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원장(경무관) 및 2개 과(6개 계, 1개 팀)체제로 재편하고 총 45명(경무관1, 총경2, 경정이하2)을 신규증원할 방침이다.

계속 보임하여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평생 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수사경찰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해당 분야 수사경력 5년 이상의 경사급 이상 수사경과자를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 및 평가를 실시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수사팀장은 수사경력 5년 이상(경위 채용자는 3년 이상)인 수사관으로,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고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위·경감으로 보임함으로써 적절하고 책임있는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경감 팀장까지 실제 수사요원화하여 경찰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팀장에게 경찰수사 개시·종결권을 부여하는 「팀별 책임수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경찰수사교육원을 신설키로 했는데, 경찰청은 경찰수사보안연구소를 「경찰수사교육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원장(경무관) 및 2개 과(6개 계, 1개 팀)체제로 재편하고 총 45명(경무관1, 총경2, 경정이하2)을 신규증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경찰수사교육원을 신설키로 했는데, 경찰청은 경찰수사보안연구소를 「경찰수사교육원」으로 확대하여 교육원장(경무관) 및 2개 과(6개 계, 1개 팀)체제로 재편하고 총 45명(경무관1, 총경2, 경정이하2)을 신규증원할 방침이다.

침이지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시·군·구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시·군·구 독자적으로 자치경찰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광역 자치단체를 배제한 시·군·구 자치 경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 회계 교양 실시

경리업무 유공직원, 표창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경찰청이 투명한 계약업무를 정착시키고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오늘 5월 13일까지 전국 산하기관 경리경찰관 3천 6백여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회계교양을 실시한다.

이번 회계교양은 지방청별로 소집해 집체교양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찰청 경리계장과 경리반장 등 8명의 교관들이 자체 발간한 2004 회계실무편람과 관서운영경비 매뉴얼을 활용해 교양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경리부서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유공직원을 선정, 상·하반기 총 1백명에 대해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지방청별로 추천된 유공직원 22명(상반기 11명, 하반기 11명)에게 외국 경찰기관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人權 경찰의 새 지평 마련 경찰청,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발표

경찰청이 최근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번 발표문을 통해 『이제는 그 누구도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하고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15만 경찰은 인류애를 바탕으로, 헌법정신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개인정보조취 관리철저 ▲수사과정 가혹행위 근절 ▲법검조사 원칙적 금지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허 청장은 「인권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며, 어느 특정기관의 전유물도 아니며,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로 보장될 수 있

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인권의 절대적 가치성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흔들림 없는 실천이 그 열쇠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허 청장은 경찰수사의 주제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경·검 간 수사권 조정 협의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신장과 경찰 수사 서비

스의 품질향상에 그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우리 경찰은 국민과의 준엄한 약속인 인권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경찰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중단 없이 전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인권보호 강화 종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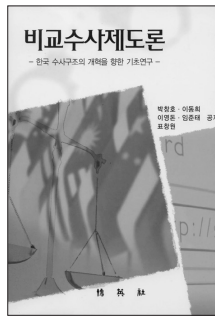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불구속수사 원칙준수	- 구속영장 신청시 수사팀장 주도 '영장심의위원회' 개최 - 압수수색영장 신청시 '영장심의위원회' 경우 - 수사관 평가시 영장 기각률 반영 - 동의 없는 경찰서 임의동행 금지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	- 범죄수법·사건 관계자 신상 비공개 원칙 - 공개수배 사안 등으로 언론 공표 한정 - 각급서 공보책임자 지정해 언론창구 일원화
개인정보조취 관리 철저	- 개인정보 조회 전담 경찰관 배치 - 조회기록·조회자 전산 기록 보관
수사과정 가혹 행위 근절	- CCTV 전 조사실 확대 설치 - 원격 화상조사제 확대 운영
법검조사 원칙적 금지	- 피의자 조사 자정까지로 제한 - 부득이한 심야조사시 조사과정절차·방법 규정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강화	- 장애인 위한 수화통역 전화기, 화면읽기 프로그램 도입 - 강력범죄 '피해자 서포터' 전담 배치

화제의 책

比較搜查制度論

- 한국 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 연구 -

이동희·박창호·이영돈·표창원·임준태 共著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경찰대학 이 동희 교수와 표창원 교수, 동국대학 임준태 교수, 그리고 현직 경찰관인 박창호 경정과 이영돈 경감 등 5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비교수사제도론 - 한국 수사구조의 개혁을 향한 기초 연구 -』란 책자가 출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출간된 이 책은 『비교수사제도론』이라는书名에

서 드러나듯 주요 국가의 수사제도를 고찰한후 우리나라의 수사제도와 종합적으로 비교 고찰되는 형식으로 집필되어 있는데, 대륙법계 수사절차를 대표하는 프랑스와 독일, 영미법계의 수사절차를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연혁적으로 이 두가지 법제를 모두 계수한 일본의 수사제도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수사제도를 주된 고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 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개괄적인 사항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특히, 5인이 共著하였기 때문에 이동희 교수가 서론 부분을, 박창호 경정이 프랑스편을, 임준태 교수가 독일편을, 표창원 교수가 영

국편을, 이영돈 경감이 미국편을, 이동희 교수가 일본편과 결론 부분을 집필하는 등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5개국을 5인의 집필자가 각 국가별로 분담하여 집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수사제도론』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분야의 종합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수사절차의 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각 국의 수사제도 및 檢警관계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료로서 뿐만아니라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 국의 수사절차나 형사사법제도를 학습하는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단일조정안 도출 실패

청와대 개입가능성 커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2일 10시30분의 마라톤 회의를 가졌으나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의 수사주체와 지휘권 문제에 대한 단일 조정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검·경 내부위원으로 출범한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마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검·경이 조속한 시일내에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마지막 15차 회의를 열고 검·경측에서 제시한 5개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해 5개안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검·경 양 기관장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날 경찰측이 제시한 방안은 ▲검·경이 이원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에 자율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방안 ▲검사를 수사주체자로 하되 경찰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경찰측은 ▲형소법 195, 196조 문제는 대통령 직속 등 특별기구를 설치해 별도 논의하는 방안과 ▲검사

를 수사주체로 두고 검사의 지휘를 인정하되 지휘가 없는 사안은 경찰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토록 하는 방안을 내놴다.

자문위는 또 핵심쟁점인 형소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사건송치나 수사보고 등 이미 합의해둔 일부 안건에 대해서는 형소법 문제와 상관없이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권고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형소법 문제는 기관 간 권한분쟁이 아니라 인권과 국민의 안정된 삶에 대한 가치관단 문제여서 조정위가 결론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오늘 조정위 활동을 종료했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실대로 기재해서 보고서를 작성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은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김종민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 간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 결과를 김승규 법무장관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문제를 놓고 검·경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데다 그동안 한 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합의안 도출도 쉽지 않아

결국 대통령 토론회 등 청와대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형소법 문제를 놓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결과 제시된 5개 조정안을 2개로 압축하는데 성공했으나 검·경측 자문위원의 원칙론적 입장으로 끝내 단일 조정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정안이 2개로 좁혀지면서 한때 회의장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기도 했으나 결국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자 “더 이상 논의는 시간낭비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며 아쉬움 짙은 목소리가 회의장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자문위원인 서경석 목사는 김일수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끝내고 언론에 최종 결과를 알리겠다”고 하자 “더 이상 논의는 시간낭비다”,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게 안타깝다”며 아쉬움 짙은 목소리가 회의장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警友會 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 났습니다

주소 : ex-police.or.kr

경우회 홈페이지가 회원이나 현직 경찰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경우회와 경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대화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이버 경우회로 탈바꿈했습니다.



◆ 최근 개편된 경우회 홈페이지

- 시대에 맞는 메인 화면 : 세련된 틀구성, 경찰가 올림, 동영상 기능 추가
- 警友會 소개 : 경우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안내
- 유익한 정보 제공 : 경우회 활동상, 경우신문 검색, 경찰 수사권, 국가보안법, 경우신문 기고문, 생활법률
- 경우 사랑방 안내 : 경우사랑방 시설 및 방문자 소개
- 주요모임 소개 : 무궁화회, 경우산악회, 법화회, 동기생, 기능별 모임 등 안내
- 대화의 창구 마련 : 자유 게시판, 건의합니다. 현직의 목소리, 경우찾기란 신설
- 경우회 사업 홍보 : 전산 소평몰, 인터넷 교육사업 등

대한민국재향경우회